

광역도로망 확충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집중

전주시, 건설안전국 신년브리핑 통해 건설 · 안전 · 도시 분야 5대 중점 추진방향 제시

전주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도로망 확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시는 14일 건설안전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도시 분야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한 5대 중점 추진방향은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추진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주거 안정 지원 △하천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다.

먼저 시는 도로 확장과 신설 등을 통해 차량 통행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한편, 지난해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토대로 전주권 교통 인프라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전주 예코시티~완주 삼봉지구(과하로)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 도로확장(백제대로, 모악로) 등 총 11개 광역도로 노선을 계획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14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건설·안전·도시 분야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에 제출했다.

해당 노선들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 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인접 시·군, 정차권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경우, 그동안 지방재정 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도로와 연결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여기에 시는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상관~색장 외곽순환도로 구축 등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활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만들기 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자연취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합리화 △에코시티 준주거용지 및 블록형 주택용지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 생활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에어로케이항공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협력

전주시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에어로케이(Aero K)’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 13일 에어로케이항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주공항 국제선 입국객을 전주로 유입하기 위한 공격적인 공동마케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에어로케이가 △일본(도쿄, 오사카 등) △중화권(타이베이, 칭다오) △동남아(나트랑, 다낭, 클락) 등 다양한 국제선 직항 노선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전주 관광 수요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내지·좌석 활용 전주관광지원 홍보 △온라인플랫폼(SNS) 연계 홍보 △현지 여행업계 및 인플루언서 초청 캠퍼 등 공동 진행 등



구체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다. 당장 시는 에어로케이의 기내 책자와 온라인플랫폼(SNS) 등을 활용한 전주의 매력을 알리는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전주가 매력적인 여행지임을 각인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에어로케이 취항 국가인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의 관광객 특성을

반영한 ‘전주특화관광상품’ 개발 및 현지 인플루언서를 초청하는 공동 캠퍼를 기획해 직접 전주를 경험하고 제작한 콘텐츠를 현지에 확산시켜 실질적인 방문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에어로케이와 긴밀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여 급변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고, 전주 주요 축제 등과 연계한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등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협력은 전주시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에어로케이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실는 것과 같다”면서 “기내에서부터 시작되는 홍보마케팅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전주로 이끌어 글로벌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서 기자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재난관리권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예방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 △일터 안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운영, 집중 안전 점검과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예방 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에 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월광·미산·조촌·공덕 등 4개 지구에 147억 원을 투입해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하소지구 저지대 침수 원천 차단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4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용머리·견원로·서완산6지구 등 급경사지 3개 지구에 대해 38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현재 계획된 광역도로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통해 전주권 교통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 덕진경찰서 치안 강화 간담회 가져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정실에서 전주 덕진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조영일 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범죄 예방 및 생활 치안 강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회와 경찰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조영일 서장은 “의회와 소통은 지역 치안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과 예방 중심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전주시의회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기획서 기자

출향 · 전입 청년 채용 기업 지원

전주시, 3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채용지원금 · 취업장려금 지급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고향을 떠난 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30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주지역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통 기업기업이면 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출향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올해 지원되는 취업청년 인원은 10명 정도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은 매월 100만 원씩 수습 2개월을 포함해 최대 12개월간 채용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무 시 최대 9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자체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취업자를 직접 선발해 신청해야 하며,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일자리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4일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리게 될 덕진공원 현장을 찾아 작가정원을 비롯해 새롭게 조성될 정원 배치 위치를 최종 선정하는 등 박람회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준비 본격화

우범기 전주시장, 주요 행사장 덕진공원 현장 점검 나서

전주시가 대한민국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사인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준비를 본격화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4일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리게 될 덕진공원 현장을 찾아 작가정원을 비롯해 새롭게 조성될 정원 배치 위치를 최종 선정하는 등 박람회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올해 박람회를 위해 기존 행사장인 전주월드컵광장 일원과 더불어 덕진공원 일대 7만㎡를 연계한 대형 정원축을 조성해 시민 힐링과 관련 산업 육성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덕진공원 일대 약 7만㎡가 신규

행사장으로 합류하면서 월드컵광장(산업전·문화 체험)과 덕진공원(정원 전시)을 잇는 도심 정원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박람회를 통한 정원 조성 규모는 지난해 5곳에서 올해는 스키리아기든소 작가정원 5곳 △기업동행정원 1곳 △서울 우호정원 1곳 △시민정원 38곳 등 총 45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우 시장은 덕진공원 곳곳을 둘러본 뒤 공원 입구 열린광장 부근에 작가정원을 배치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 통해 새로 조성되는 정원을 덕진공원만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전통성과 수변 경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기획서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